

여야, 탄핵안·쌍특검 강대강 대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해져

홍익표 “탄핵안 반드시 통과” 처리 의사 시사

국힘 “국회정신 훼손하는 폭주… 막무가내”

쌍특검도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영향 미칠 듯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과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추가조각 의혹 쌍특검 추진 등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위원장과 손준성·이정집 검사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을 하더라도 분명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저희 단독으로, 다른 야당들은 다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의지가 국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폭주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 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합의와 존중이라는 국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거야(巨野) 폭주가 끝이 없다”며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장악을 시도한다는 자신들만의 ‘괴뢰설’로 정부 인사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은 내쳐지만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이라며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 강행 추진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며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할 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자기들 입맛대로 칼질하고,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적 예산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레 놓고도 정작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치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쌍특검 역시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정기국회 일정이 다음달 1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감세 기초, 민주당은 민생예산 증액 기초로 충돌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에 나서기 전 상임위 단계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7,053억원, 3만원 청년패스 예산 2,923억원, 소상공인 에너지요금·대출이자 지원 예산 2조 3,000억원 등 5조원 이상의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경우 R&D(연구개발) 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원 증액하고, 정부가 정한 사업예산 1조514억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에는 현행법상 정부 동의를 필요하다는 점, 여당과의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세수 부족이 이어져 예산 증액 부분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 등을 마두어보면 시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심사를 마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이 유일하다. 지난해에는 22일이나 넘기면서 역대 최장기간 지연 처리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감세 기초, 민주당은 민생예산 증액 기초로 충돌을 빚고 있다.

‘대한민국, 위기 넘어 새로운 길로’

이낙연계 ‘연대와공생’, 28일 포럼

정치·경제·안보 위기 해법 모색

유튜브 ‘정치의 숲’ 통해 생중계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 경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연대와공생은 오는 28일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라는 주제로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외교·안보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기초연선을 시작으로 김경수 상군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영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삼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연대와공생 이사회에서는 남평오 부이사장, 최윤열 상임이사, 김성주 이사 등이 나서 각 세션을 주재한다. 이 전 대표는 기초연선 뿐만 아니라 각 세션의 토론에 모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이 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연대와공생 상임고문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개 학술행사다. 연대와공생은 공식 유튜브 채널 ‘정치의 숲’을 통해 이번 행사를 생중계할 방침이다.

/뉴스스

민주 안호영 의원

29일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장수군, 재선)이 29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두 권의 저서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를 열어 지난 8년의 의정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안호영의 말’은 제1야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보듬는 일에 앞장서 온 안호영 의원의 논평을, ‘안호영의 길’은 지난 8년간 여야 상임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기후 위기 대응·균형발전·미래농업에 기울여온 안 의원의 노력과 향후 비전을 담고 있다.

한편, 도서는 현장에서 출판사를 통해 정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군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두 권의 저서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를 열어 지난 8년의 의정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원인 관련 브리핑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원인 및 향후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원인 및 향후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스

“공익수당 지원대상 농민단위로 확대해야”

권요안 도의원, 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예산 심사서

“인건비·농자재 가격 올라 농업경쟁비 부담 가중

내년 추경 통해 농민단위 공익수당 예산 편성율”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24일 농생명축산식품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가 내년 본예산에 농가단위로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을 농민단위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와 모든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농업경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농가단위 공익수당을 농민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권 의원은 “충남이 올해부터 농촌 분야 예산 지원을 통해 농민의 고충을 덜어줘야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농민의 어려움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의문이다”며, “농가단위 공익수당 예산을 농민단위로 확대 편성하고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저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최근 농촌의 인구감소·고령화, 농지감소,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해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청년농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부분 비중이 2.9%에 해당해 농업농촌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재훈 기자

남원시의회 상임위

주요 사업장 현지 감사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4일, 제26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자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지치행정위원회는 주생면 중동리 파크골프장을 살피고 요즘 부응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을 선도적으로 준비해 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또한, 경의 상가의 어린이 과학 체험관 많은 예산을 들여 개관했는데 체험관의 이용객 수가 저조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확인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운봉읍 비래봉의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허브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지리산 허브밸리가 남원시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의 시정 방안을 의견을 냈다.

/남원=김기무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도의회 상임위, 내년 예산안 심사

환복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증액 배 이상”

새만금해양수산국 등 대상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24일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전북도 재정여건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업예산 축소로 인해 도내 어업인과 어가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양식어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새만금 홍보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새만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매년 반복적인 홍보외에 새로운 홍보 내용 및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관련해 예산 증액이 배 이상이라고 지적하고, 사업내용은 행사운영 가격할인 택배비 홍보비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며 내년도 증액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이차전지 특화

단지 지정 관련해 관련 시설이 들어오려면 전기공급 기반시설이 선행돼야 한다며, 새만금구역내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편성한 예산 집행률이 0%라며 내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묻고 민관지원단의 구성 및 역할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울러 해수욕장 안전관리위원 운영 사업의 안전요원 인력 25명 감축에 대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감축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어업인 단체 지원 사업 관련하여 유사한 직종인 농업인 단체, 임업인 단체 등에 비해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물론 수산업 관련 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어업인 권익 보호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 “리모델링 표준설계 시스템 도입해야”

도교육청 행정국·직속기관 대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에 걸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13개 직속기관의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4,400만원이 증가한 5,574억2,200만 원을, 6개 교육문화화관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9,500만원이 증가한 130억 9,400만원을, 7개 기관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1,100만원이 증가한 311억 200만원을 제출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농어촌의 교육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기숙사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주문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세수 감소로 인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국외연수를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 하겠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을 하고 있

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중한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술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등 리모델링 예산 편성이 기관마다 제각기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생각이더라”며 “리모델링 표준설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연국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직원 고충에 대한 상담제도 등 꼭 필요한 제도이다”며 인사 고충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 인사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국가 차원의 사업 종료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비에 포함된 국비 30%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도민들에게 혼란이 없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